

# 노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길 열리나

### 광주지법 “지자체, 65세 이상 서비스 중단 안돼” 전국 첫 판결 “고령 될수록 지원 필요성 더 늘어날 것”... 정부 지침 폐기 관심

“주간활동 서비스 중단처분 취소 소송 원고 계신가요?”

지난해 만 65세가 된 발달장애인 A(여)씨는 지난 8일 광주지법 206호 법정에서 광주지법 행정1부 박상현 부장판사의 호출에 출석해 일어났다.

재판장이 “그냥 자리에 앉아서 들으셔도 된다”고 제지했지만, A씨는 원고석으로 나아갔다.

재판부는 주저없이 “피고(광주시 광산구)가 2023년 5월 9일 원고에게 내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비로소 A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이번 판결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지자체가 연령 제한(65세 이상)을 이유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한하는 행정조치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그동안 나이를 이유로 발달 장애인 서비스 등을 중단해온 지자체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국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지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침에는 ‘주간활동 서비스’는 ‘만 65세 미만’만 이용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광주시 서구에 사는 발달장애인 한 명이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복구에 사는 1958년생 B(여·지적장애인, 2인 가구)씨도 만 65세 생일을 맞이하는 달의 다음 달로 서비스가 중지된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발달장애인 개인의 참여 욕구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지언정, 발달장애인이 일정 나이를 넘어서고 필요성이 없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간 활동 서비스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법 시행규칙에는 주간활동 서비스의 내용·방법 등을 구체화 하고 있을 뿐 주간활동 서비스의 신청 자격에 관해 위임(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의 해석이다.

재판부는 “신청자격 지침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없는 것으로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봐야 한다”면서 “신청자격 지침이 65세에 도달한 발달장애인을 일률적으로 신청자격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배돼 지자체의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이 고령이 됨에 따라 오히려 지원의 필요성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현 복지부 지침은 발달장애인법 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광산구와 광주시는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들에게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 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광주시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예산은 약 82억 원(국비 약 51억원, 시비 약 31억원)이고, 광주시가 별도로 지원하는 (주말)주간활동서비스 총사업비는 약 9억 원이지만 지난해 6월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는 5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달장애인법령에 신청 자격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두어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이고, 행정청이 신청자격에 관한 심사기준과 심사방식을 강화해 불필요한 급여 제공을 억제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다”고 꼬집었다.

A씨는 광주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의 도움을 받아 용기를 냈고 소송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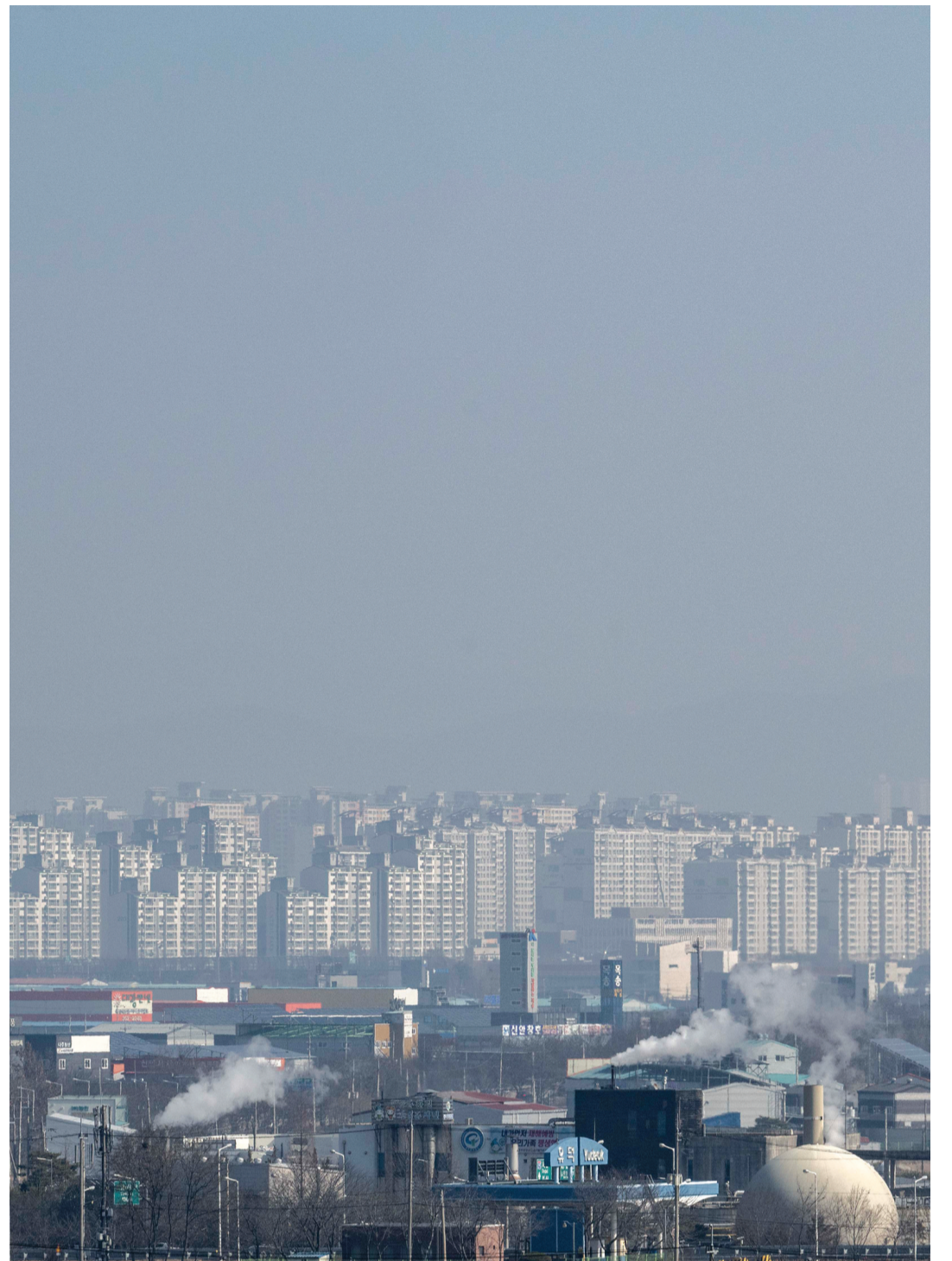
A씨는 광산구가 만 65세가 됐다며 ‘주간활동서비스 중지 결정 통지서’를 보내오자 소송을 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65세 이전에는 총 314시간(주중 주간활동서비스 132시간, 주말 주간활동서비스 32시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50시간)을 지원 받았으나 광산구의 조치로 모두 152.5시간(노인장기요양서비스 62.5시간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 보전 90시간)으로 감소해 큰 불편을 겪었다.

광주시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이날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지법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시대 장애인들 간에도 차별을 발생시키는 나이 제한 지침을 즉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뿌연 하늘 12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에서 바라본 치평동 일대가 흐릿하다. /김진수 기자 jeans@

## 광주 남구 ‘중증 장애인 생상품’ 우선 구매 확대

### 올해 2억8800만원 설정

광주시 남구가 ‘중증장애인 생상품 우선구매’ 목표액을 증액했다.

남구는 올해 중증장애인 생상품 우선구매 목표액을 2억8800만원으로 설정했다.

중증장애인 생상품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상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

화한 제도다.

남구는 지난해 남구 총구매액(221억5384만원)에 1.3%를 적용했다. 제도 기준액(1%)보다 높은 수치다. 남구는 하반기 여건에 따라 구매액을 최대 2%까지 높일 방침이다.

목표액 도달을 위해 남구는 각 부서와 17개 동 행정복지센터 사무관리비를 기준으로 목표액을 배정하고 상반기 중 각종 용역과 물품 구매에 나설 계획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광주시청소년노동센터 상담

### 3명 중 1명 “최저임금 못받아”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센터)는 ‘2023년 상담 통계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센터에 상담을 신청한 청소년은 총 411명으로 537회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청소년 상담자 임금수준을 분석해 본 결과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은 37.8%에 달했다.

지난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받지 않은 경우는 49.6%에 달했다. 허위로 작성한 경우도 6.1%였다.

상담의 내용은 임금에 대한 문의가 42.0%로 가장 많았으며 주휴수당(11.3%), 최저임금(7.7%), 퇴직금(6.7%) 순이었다.

임금 이외 상담 내용은 근로계약 체결과 해지(14.0%), 신고 절차(13.1%), 근로 시간 및 휴가(8.6%), 세금 공제 및 구직급여(7.9%), 해고(6.6%)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노동 문제는 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의뢰하기에는 비용적 부담이 커 청소년들이 혼자 해결하려 하다 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센터의 설명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무등산 인왕봉 전망대~군부대 정문 등 탐방로 통제

### 15일~4월 30일 산불 조심기간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광주·전남지역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가 출입 통제된다.

국립공원공단은 봄철 건조기 국립공원 생태환경보호와 산불 방지를 위해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리산과 월출산, 무등산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무등산 국립공원에서는 인왕봉 전망대~군부대 정문, 광일목장 입구~신선대 갈림길, 선주암 삼거리~서인봉 갈림길 등 총 3개 구간이 전면 통제된다.

전남·전북·경남에 걸쳐 있는 지리산에서는 총

26개 구간의 탐방로가 통제 되고 전남지역은 5개 구간이 출입이 금지된다.

5개 구간 중 4개 구간(노루목-반야봉 삼거리, 성삼재-만복대, 상위마을-묘봉치, 당동-당동고개)은 전면 통제, 1개구간(피아골 삼거리-피아골 대피소)은 부분 통제된다.

영암 월출산 국립공원은 무위사부터 미왕재까지 1개 구간에 대해 출입을 제한한다.

한편 국립공원 내에서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하는 것이 금지돼 있으며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없이 출입할 경우 자원공원법 제86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광주 북구,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 본격 시행

### 수수료 30만원 전액... 50명 한도

광주시 북구가 이달부터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 비용을 지원한다.

북구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올해 신규 정책으로 ‘국적취득비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북구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지원금은 국적취득 수수료 비용 30만원 전액으로 총 50명에게 지급된다.

지원 접수는 이달부터 사업예산(1500만원) 소진 시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 여성보육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달 20일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김다인 기자 kdi@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